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정진아\*\*

머리말

- I. 1950년대 후반 '사상계 경제팀'의 형성
  - II.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 III. 군사정권의 등장과 '사상계 경제팀'의 전면 교체
- 맺음말

## 요약

1950년대 후반 성장환을 중심으로 이상구, 유창순, 이정환, 이동욱, 이창렬로 구성된 '사상계 경제팀'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상계 경제분야에 논설을 기고하며 『사상계』의 개발 담론을 주도했다. '사상계 경제팀'은 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사상계 그룹은 이를 4·19 혁명을 계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HK교수

투고일: 2012년 2월 3일

심사일: 201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22일

이 글의 논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어 익명의 심사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승한 민족혁명으로 평가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주요 기간산업(전력·석탄·정유·비료·제철)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하고, 소비절약과 내핍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자보다는 내자, 특히 정부 재정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최고회의 및 각 부처에 광범위한 자문단을 두어 민심을 읽고, 경제정책의 골격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상계 경제팀’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호응하였던 것은 군사정권이 이들이 구축해온 개발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상계는 분명 반공 민족주의, 근대주의로 가득 찬 텍스트이다. 그러나 20세기는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의 시대였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냉전과 분단, 전쟁과 전후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휘말려 있던 한국 지성계가 민족주의와 근대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점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지성계가 축적해온 개발 담론이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일정하게 반영되면서 자본과 시장 주도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계획이라는 방식으로 정초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6·25 전쟁 후와 군사정권 등장 후 균등경제와 공익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던 헌법 조항들이 대폭 손질됨으로써 제헌헌법에서 국가에 부여되었던 역할 중 공공성의 영역은 현저히 축소되었고, 국민생활은 자본의 논리와 생산력 지상주의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군사정권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목표로 표방되고 있었다.

이는 적어도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변화와 혁명을 표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군사정권의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경제개발계획은 일종의 ‘수동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군정연장과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통해 군사정권과의 경계선을 찾은 사상계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제 군사정권에 의해 전유된 개발담론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대항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주제어 : 사상계, 사상계 경제팀, 개발 담론, 국가주도의 산업화,  
경제개발계획, 5·16 군사쿠데타, 군사정권, 수동혁명

## 머리말

『사상계』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사상계』는 이승만정권, 장면정권, 박정희정권, 세 정권 시기에 걸쳐 발행된 종합잡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 1950년대와 1960년대를 독해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상계 그룹은 장면정권과 친화성이 있고, 민주당 신파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알려졌다. 장준하, 신응균, 이만갑 등 사상계 인물들의 국토건설본부 참여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때문이었다. 그동안 『사상계』와 사상계 그룹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사상계 그룹이 서북지역을 주요기반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였으며, 반공근대화론을 공유했다고 평가하였다.<sup>1)</sup>

사상계 그룹의 이념적 계보에 대한 평가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김준엽, 신상초, 안병욱, 김성한 등 『사상계』 초창기부터 폐간까지 장준하와 입장을 함께 한 핵심인물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소수 핵심인물 중심으로 『사상계』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은 『사상계』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조를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상계』에 담겼던 수많은 논의가 갖는 의미를 누락시키고 부조화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상계』에는 다양한 필진들이 공존했고, 이들의 생각에는 다소간의

---

1) 이용성, 1997, 『『사상계』의 지식인과 잡지이념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5, 경인문화사 ;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 김상태, 2008, 『1950년대~1960년대 초반 평안도 출신 『사상계』 지식인층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45 참조.

편차가 존재했다. 각 정권에 대한 입장과 비판의 지점도 달랐다. 그리고 정세에 따라서 그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기도 했지만, 혼돈을 겪기도 하고 입장이 분화되기도 했다. 이것이 『사상계』가 끊임없이 재독해 되고 있는 이유이고, 다시 분석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사상계』의 근대화 담론이 군사정권의 근대화론·개발 담론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사상계 그룹이 군사정권의 반공근대화론 창출에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sup>2)</sup> 20세기는 민족주의와 근대화의 시기였고, 사상계는 분명 반공 민족주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군사정권과 공유 지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과 공통분모를 가진다는 것은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사상계 그룹의 근대화 담론뿐 아니라 경제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상계 그룹의 경제론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론과 관련하여 주요 논자로 참여한 성장환, 김영철, 이정환, 이동욱, 고승제, 황병준을 사상계 그룹으로 명명하고, 이들이 민간주도 경제개발론을 주장했으며 민주당 신파와 결을 같이 하였다는 평가가 제출되어 있다.<sup>3)</sup> 그러나 과연 사상계 그룹은 누구이며 성장환, 김영철, 이정환, 이동욱, 고승제, 황병준을 사상계 그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사상계 그룹은 누구인지, 사상계 그룹이 과연 민간주도 경제개발론을 주장했는지, 사상계 그룹이 민주당 신파(김영선, 주요한)와 경제정책론에 있어서 정책적 입장을 같이 했는지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2) 김보현, 2003,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 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 『정치비평』 10 ; 이상록, 2007,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 ; 권보드래, 2010,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

3)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50~52쪽.

이 글에서는 사상계 그룹의 경제론을 분석하기 위해 『사상계』 경제 분야 편집위원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사상계』는 1953년부터 편집위원 제도를 두었다.<sup>4)</sup> 『사상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지를 표방하였고, 다양한 성향의 필진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편집위원들이 편집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다수의 논설을 투고하면서 『사상계』는 1956년부터 일정한 논조를 가지게 되었다. 경제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상계』 경제 분야 편집위원들을 ‘사상계 경제팀’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상계 그룹의 경제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상계 편집위원회 제도의 출발과 편집위원 구성, 경제 분야 편집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상계 경제팀’의 경제론, 특히 개발 담론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권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사상계 그룹이 분화하는 과정을 고찰한 후, 군사정권의 경제정책과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 I. 1950년대 후반 ‘사상계 경제팀’의 형성

『사상계』는 1953년부터 편집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7월부터 『사상계』는 원고모집 공고를 편집위원회 명의로 내고,

---

4) 장준하, 1985, 「브니엘」, 『장준하문집 :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 유경환, 1995, 「『사상계』 15년 小史, 1953~68년」, 『민족혼 · 민주혼 · 자유혼: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참조.

“투고된 원고는 본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게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잡지 편집에 전권을 행사하는 편집위원회의 출범을 내외에 알렸다. 당시 공개된 편집위원 명단은 김재준, 김기석, 오영진, 홍이섭, 정태섭, 엄요섭, 김병기의 7인이었다.<sup>5)</sup> 편집위원들은 편집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원고를 모집하며 내용을 검토하는 일을 맡았다.<sup>6)</sup>

『사상계』의 편집위원은 1955년 1월 장준하, 엄요섭, 홍이섭, 정병욱, 정태섭, 신상초, 강봉식, 안병욱, 전택부, 김성한의 10인으로 정비되었다. 1953년과 비교해 볼 때 발행인 장준하가 편집위원에 들어가고 엄요섭, 홍이섭을 제외한 인물들이 빠졌으며 이후 『사상계』를 대표하는 신상초, 안병욱, 김성한이 합류하는 변화가 있었다. 김성한이 주간으로서 편집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사상계사의 내부 질서도 잡히기 시작하였다.

신상초, 안병욱, 김성한의 합류로 『사상계』는 본격적으로 자기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국제)정치, 철학, 문학 분야를 담당하여 필진으로 활동하는 한편,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에 기초해 잡지의 편집 기조를 잡아나갔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경제 분야의 전담자라고 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 경제 분야 전담자가 없었기 때문에 1953년부터 195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경제 논설의 수가 적었고, 김영선, 배성룡, 안림, 원용석, 성장환, 이창렬, 최호진, 배성룡 등 다양한 색채를 가진 논자들의 글이 실렸다. 김영선은 민주당 신파, 원용석은 자유당, 배성룡은 중간파적 색채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 외 안림, 이창렬, 성장환, 최호진은 학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로서 그 경향성은 다양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5) 1953. 7, 『사상계』 14, 246쪽, 社告 참조.

6) 장준하, 1985, 「브니엘」,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112쪽.

7) 성장환은 뉴딜과 같은 케인즈식 경제정책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고(성장환, 1955. 9, 『심우』), 안림은 “자본주의적 통제만으로써는 산업부흥과 민족자본의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론보다 현실이 더욱 명시해주는 바이다. 우리들의 경제활동의 당위는 통제경제 이후요, 계획경제 이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안

『사상계』는 전후 한국사회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철학·종교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상계』는 이에 1954년 12월부터 독자들의 성원에 부응하는 한편, 독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교감을 높이기 위하여 독자들의 이야기와 사상계에 대한 평가를 담은 「독자통신」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독자통신」란에 ‘독자제위 앞(편집부가 전하는 말)’이라는 코너를 두어 독자들의 질문과 지적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에 대해 성의껏 답변을 하였다. 특히 “논설들이 정치경제, 철학, 종교에 중점을 두어 너무 딱딱하니 문예면을 강화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문예물을 중심으로 한 전문지들이 있으므로 『사상계』는 종합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sup>8)</sup>

종합지로서의 목표와 편집 방향은 1955년 8월부터 책머리에 실린 장준하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더욱 분명히 제시되었다. 『사상계』는 “자유를 적을 쳐부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민족 사생의 간두에서 민족의 동량이 될 청년 학생의 대열에 등불이 되고 지표가 됨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 한편 “전통을 바로잡고” 세계의 “지적 소산을 매개하는 공기로서 자유·평등·평화·번영의 민주사회 건설에 미력을 바치고자” 한다는 내용이였다. 청년 학생층을 주요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전통을 재해석하며 다양한 서양 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함으로써 반공적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잡지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sup>9)</sup> 사사오입 개헌 이후 자유당정권의 정치 전횡이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사회 건설의 지표

---

림, 1951. 11, 「통제경제논의와 문제점」, 『식은조사월보』 8-1(안림, 1954, 『전란후의 한국경제』, 박영사, 11쪽에 제수록).

8) 1954. 12, 『사상계』 2-9, 7쪽.

9) 1955. 8, 『사상계』 3-8, 3쪽.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를 표방하는 『사상계』의 편집 방향은 청년 학생층과 지식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상계』의 목표와 편집 방향 설정은 주효했다. 『사상계』는 1955년 10월호에 편집위원 명의로 “강호 제현의 절대하신 성원리에 본지가 약진을 거듭하게 되온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이다”라는 감사의 글을 실었다.<sup>10)</sup> 1955년 들어 잡지의 목표와 편집 방향이 분명해지고, 편집위원회가 정비되면서 『사상계』가 지식인층에게 주목받는 잡지로 급성장한 것이다.<sup>11)</sup> 독자들의 호응에 부응하여 지면 또한 1954년에는 200면, 1955년에는 300면 정도였던 것이 1956년 10월에는 360면으로, 11월에는 다시 374면으로 늘어났고 발행부수도 급증하였다. 『사상계』는 창간호부터 3천부를 발행해왔으나, 1955년도 6월호는 8천부, 1955년 12월에는 1만 3천부, 1956년도에는 3만부를 돌파하여 전성시대를 맞게 되었다.<sup>12)</sup>

독자들의 성원에 부응하여 『사상계』는 1956년 1월 김준엽, 성장환을 영입하여 편집위원회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사상계』는 명실상부한 종합지로서 정치·경제 분야에 학문적인 식견을 가진 필진과 논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김준엽, 성장환은 사상계의 핵심 논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학계의 인맥을 활용하여 사상계의 지면을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

10) 1955. 10, 『사상계』 3-10, 10쪽.

11) 1958년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합류한 김하태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사상계』는 “must read”였다고 회고했다(전인수·박지원, 2005, 「김하태 박사 인터뷰」, 『신학논집』 41, 242쪽).

12) 장준하, 1985, 「브니엘」,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120~122쪽 ; 유경환, 1995, 「《사상계》 15년 小史, 1953~68년」, 『민준환·민주훈·자유훈: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267쪽 참조.

【표 1】 1953~1962년 『사상계』 편집위원 명단

시기 (연. 월)	편집위원 명단	비고
1953. 7	김재준, 김기석, 오영진, 홍이섭, 정태섭, 엄요섭, 김병기	편집위원 구성
1955. 1	장준하, 엄요섭, 홍이섭, 정병욱, 정태섭, 신상초, 강봉식, 안병욱, 전택부, 김성환(주간)	편집위원회 정비
1955. 6	엄요섭, 홍이섭, 정병욱, 정태섭, 강봉식, 안병욱, 전택부, 김성환(주간)	
1955. 7	장준하, 엄요섭, 홍이섭, 정병욱, 김준엽, 정태섭, 신상초, 한교석, 강봉식, 안병욱, 전택부, 김성환(주간)	
1956. 1	장준하, 엄요섭, 성장환, 홍이섭, 김준엽, 정병욱, 정태섭, 한교석, 신상초, 강봉식, 안병욱, 김성환(주간)	성장환 합류
1958. 4	김상협, 김성환(상임), 김준엽(상임), 김하태, 신상초, 성장환(상임), 안병욱(주간), 오몽, <sup>13)</sup> 유창순, <sup>14)</sup> 이상구, 이종진, 장경학, 정병욱, 한우근, 현승중, 황산덕	성장환 상임, 유창순·이상구 합류
1958. 9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성장환(상임),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오몽, 유창순,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8. 11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성장환(상임),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오몽, 유창순,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이정환 합류
1959. 1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성장환,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오몽, 유창순,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9. 3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여석기, 오몽,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성장환 빠지고 이동욱 합류
1959. 4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엄요섭, 여석기, 오몽,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9. 5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엄요섭(상임), 여석기, 오몽,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9. 6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상임),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엄요섭, 여석기, 오몽,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시기 (연. 월)	편집위원 명단	비고
1959. 7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엄민영, 엄요섭, 여석기, 오몽,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병욱,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9. 9	김상협, 김준엽(상임), 김하태, 박남수, 신상초, 안병욱(상임, 주간), 엄민영, 엄요섭, 여석기,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59. 11	김상협, 김준엽(주간), 김하태, 박남수, 신상초, 안병욱, 엄민영, 엄요섭, 여석기, 유창순, 이동욱, 이만갑, 이상구, 이종진, 이정환, 장경학, 정태섭, 한우근,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60. 2	김상협, 김하태, 신상초, 안병욱, 여민영, 여석기, 이동욱, 이만갑, 이정환, 이종진, 정태섭,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유창순, 이상구 빠짐
1960. 4	김상협, 김하태, 신상초, 안병욱, 엄민영, 여석기, 이동욱, 이봉숙, 이만갑, 이정환, 이종진, 정태섭,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운영위원회 신설 <sup>15)</sup>
1960. 6	김상협, 김하태, 신상초, 안병욱, 엄민영, 여석기, 이동욱, 이봉숙, 이만갑, 이정환, 이종진,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60. 12	김상협, 김하태, 신상초, 신응균, 안병욱, 엄민영, 여석기, 이동욱, 이봉숙, 이만갑, 이정환, 이종진,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61. 3	김상협, 김성환, 김증환, 김하태, 성장환, 신상초, 안병욱, 양호민(상임, 주간 대리), 엄민영, 여석기, 오몽, 이만갑, 이봉숙, 이정환, 이종진, 이창렬,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성장환, 이창렬 합류
1961. 4	김상협, 김성환, 김증환, 김하태, 성장환, 신상초, 안병욱, 양호민(상임, 주간 대리), 엄민영, 여석기, 오몽, 이만갑, 이봉숙, 이정환, 이종진, 이창렬, 최문환,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61. 5	김상협, 김성환, 김증환, 김하태, 성장환, 안병욱, 여석기, 오몽, 이만갑, 이봉숙, 이정환, 이종진, 이창렬, 최문환, 한태연, 현승중, 황산덕	
1962. 10	김성환, 김영록, 안병욱, 여석기, 이만갑, 현승중 <sup>16)</sup>	경제 분야 편집위원 전원 교체

\* 출처 : 『사상계』 각 호에 실린 편집위원 명단을 토대로 재구성.

13) 오몽은 신응균의 필명이다.

14) 편집위원 명단에는 유창현(劉彰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상계』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진담했던 유경환이 『『사상계』 15년 小史, 1953~68년』에서 유창순으로 회고하였으므로 유창순으로 재정리하였다.

15) 1960년 4월부터 사상계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운영위원 명단은 김준엽, 송병무, 엄효석, 유창순, 장준하,

1956년을 기점으로 분야별 기본 틀이 짜인 편집위원회는 1958년 4월 창간 5주년을 맞아 “편집의 완벽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자” 편집위원을 1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상임 편집위원 제도를 신설하였다.<sup>17)</sup> 상임 편집위원으로는 김성한, 김준엽, 성장환이 선정되었다.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상임 편집위원들은 학교 강의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사상계사에 출근하여 편집계획과 내용을 검토하였고,<sup>18)</sup> 주간 안병욱과 더불어 필진 선정과 편집 방향에 대해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1958년 4월 편집위원 증원에 있어 주목할 만한 양상은 경제 분야의 강화였다. 1956년 1월 성장환이 사상계 편집위원에 합류하면서 『사상계』 경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편집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이승만정권의 경제 실정(失政),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 농촌의 궁핍화 현상, 경제개발 등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의 인적 보강이 필요했다. 편집위원들이 필진 선정과 편집을 담당할 뿐 아니라 주요 논설을 기고함으로써 『사상계』의 중요한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던 만큼<sup>19)</sup> 경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편집위원의 증원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장환은 편집위원 증원 과정에서 경제 분야 편집위원을 대거 증원하였다. 먼저 이상구와 유창순이, 그 다음에는 이정환, 이동욱, 이창렬이 차례대로 편집위원회에 합류하였다.

한국은행 조사부장 유창순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학계와 언론계에

---

정태섭이었다.

16) 1962년 10월 당시 편집·발행·인쇄인은 대표 장준하, 주간은 양호민, 편집국장 은 신일철, 취재부장은 김동준, 편찬부장은 이종인, 업무부장은 장창하였다(1962.

10, 『사상계』 10-10, 표지 참조).

17) 1958. 4, 『사상계』 6-4, 사고(社告).

18) 장준하, 1985, 「브니엘」,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118쪽.

19) 전인수·박지원, 2005, 「김하태 박사 인터뷰」, 『신학논집』 41, 242쪽 참조.

몸담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제일 먼저 사상계 편집위원회에 합류하였고 상임 편집위원을 맡았던 성장환<sup>20)</sup>은 고려대 교수로서 화폐금융 전문가였다. 성장환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한국은 유효수요가 부족한 서구와 달리 자본부족이 문제지만, 케인즈적인 정부의 집중적인 투융자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21)</sup> 따라서 정부의 집중적인 투융자정책을 통해 생산과 직결된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았다.

이상구<sup>22)</sup>는 서울대 교수로서 국제경제 및 외환문제 전문가였다. 그는 환율 고평가가 지속되면 국제수지가 악화되므로 환율을 단순한 가격정책으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수출 진흥, 화폐가치 안정 등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이정환<sup>24)</sup>은 연세대 교수로서 경제정책과 경제성장 문제를 다루었다.

20)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93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1940년 일본 야마구치고등학교, 1943년에는 교토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1952년 부산대 교수를 거쳐 1953년부터 고려대 교수가 되었다. 1961년에는 최고회의 의장 고문과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1964년에는 경제과학심의회 비서임위원 및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1970년에는 KDI이사장을 역임하였다(『조선일보 인물DB』; 합동통신사, 1972, 『현대 한국인명사전』).

21) 성장환, 1955. 9, 「한국경제의 진로」, 『심우』 참조.

22) 1919년 만주 장춘에서 태어나 1937년 만주 신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일본 오이타고등상업학교를 거쳐 1942년 고베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식산은행에 근무했고, 1946년 고려대 교수를 지냈다. 1947년부터 1965년까지는 서울대 교수를, 1965년부터 1985년까지는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학술원 회원(국제경제)이다(『조선일보 인물DB』; 합동통신사, 1972, 『현대 한국인명사전』).

23) 이상구, 1957. 7, 「환율개정문제」, 『사상계』 5-7, 51·54쪽.

24) 1919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도쿄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부산대 교수를 거쳐 1952년 연세대 교수로 부임하였다. 1960년 과도정부 경제심의회 부의장, 1962년 농업중앙회 회장, 1963년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였다. 1964년에는 재무부장관과 산업은행 총재에 취임하였고,

후진국이 산업을 육성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간섭하여야 하며 보호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5)</sup>

이창렬<sup>26)</sup>은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국제경제 및 화폐금융, 자본동원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1940년대 말 식산은행 조사부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한국경제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화폐적 안정이 아니라 생산의 증강이며, 민간자본이 취약하고 경제구조가 후진적인 한국경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계획과 원료 및 자재의 공급, 기술지원 등 국가권력을 총집중하고 계획경제정책을 투철하게 추진함으로써 생산증강, 산업부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유창순<sup>28)</sup>은 한국은행 조사부장으로 금융문제 전문가였다. 그는 화폐금융 문제 전문가였지만 단순히 화폐의 수량조절, 자유경쟁만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립을 위한 ‘경제대강’이 작성되고, 그에 준한 계획을 통해 한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29)</sup>

---

1981~84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지냈다(『조선일보 인물DB』; 합동통신사, 1972, 『현대 한국인명사전』).

25) 이정환, 1958. 12, 「경제적 자유」, 『사상계』 6-12, 41~42쪽.

26) 1917년 평남 진남포에서 태어나 1946년 경성대 법문학부를 졸업했다. 1951년 한국은행 조사역을 거쳐 1955년 고려대 교수가 되었다. 1960년 미국 워싱턴대학원에서 수학하였고, 1972년 외자도입심의위원,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합동통신사, 1972, 『현대 한국인명사전』).

27) 이창렬, 1949. 3, 「산업부흥의 신구상」, 『민성』 33, 29~32쪽.

28) 1918년 평남 안주에서 태어나 1937년 평양상업고등학교와 1950년 미국 헤이스팅스대를 졸업했다. 1951년 한국은행 동경지점장, 1953년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을 거쳐 1957년 한국은행 조사부장이 되었다. 1960년 부흥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했고, 1961년 한국은행 총재, 1962년 상공부장관,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었다. 이후 롯데제과 회장, 무역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재계에서 활동하였고, 1982년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부임하였다. 2002년에는 국민통합21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냈다(『Joins 인물정보』; 합동통신사, 1972, 『현대 한국인명사전』).

29) 윤세원 · 신응균 · 유창순 · 김상협 · 김하태 · 황산덕 · 김성한 · 김준엽 · 안

한편, 이동욱<sup>30)</sup>은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 논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금융, 산업부흥,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농촌 문제 및 경제 체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 문제 일반에 대한 논설을 기고하였다. 이동욱은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 관권 경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개인의 이윤추구욕에 기반하여 생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자유경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이렇게 『사상계』 경제 분야 편집위원 중 성장환, 이정환, 이창렬, 유창순은 『사상계』에 합류하기 전부터 정부의 일정한 개입과 계획을 통한 급속한 산업화를, 이동욱은 자유경제의 전면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1950년대 중반까지는 귀속재산 불하, 국영기업체 민영화, 자유경제의 확대를 주장하였다.<sup>32)</sup> 이승만정권기 기업과 관권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부패보다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합류하여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었던 경제개발의 내용과 방법을 비롯하여 원조, 화폐 금융, 외환, 국제수지, 무역, 실업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대한 논설을 기고하면서 『사상계』의 개발 담론을 주도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들을 『사상계』 경제론을 이끈 주요 인물들로서 ‘사상계 경제팀’으로

명옥, 1958. 4, 「좌담회: 우리사회와 문화의 기본문제를 해부한다」, 『사상계』 6-4, 272~273쪽, 유창순 발언 참조.

30) 1917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나 1941년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했다. 1947년부터 동아일보에 몸담았고, 1961년 9월에는 경제기획원 중앙경제계획위원을 역임했다. 1968년 동아일보 이사 겸 주필, 편집인을 거쳐 1977년 동아일보 사장이 되었다(『조선일보 인물DB』; 外務省アジア局 監修·霞關會 編, 1962, 『現代朝鮮人名事典-1962年版』, 世界ツァ-ナル社).

31) 이동욱, 1952. 9.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하)」, 『주간경제』 7.

32) 이동욱, 위의 글; 이창렬, 1954. 1. 1, 「한국부흥의 계획과 실천」, 『주간경제』 24; 성장환, 1954. 3, 「물가안정과 산업진흥의 기본대책-저축과 투자문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참조.

명명하고, 다음 장에서는 『사상계』의 논설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론, 특히 개발 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 1. 산업구조 재편론

‘사상계 경제팀’은 해방 후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간 억압되었던 구매력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생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악순환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는 식민지의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화폐적 안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경제근대화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었다.<sup>33)</sup>

‘사상계 경제팀’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으로 기형화”되어 있으므로 공업을 발전시켜 그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농업 중심의 발전방식이나 농업과 공업의 동시 발전이 아니라, 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생산성이 높은 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창렬은 한국 상황에서는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바랄 수 없으며, 자료와 원료와 유효수요를 가장 많이 파급시킬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34)</sup>

33) 이창렬, 1954. 1. 1, 「한국부흥의 계획과 실천」, 『주간경제』 24, 29쪽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정환은 한국의 경제정책을 농업 발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농업 지상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산업구조 기형화의 핵심은 “물적 생산업”인 제2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낮은 제1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인 제3차 산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것이었다. 이창렬은 1953년~1957년까지의 통계분석을 통해 총취업 인구의 70% 이상을 점하는 제1차 산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불과하며, 총취업인구의 3% 정도인 제2차 산업의 성장률이 제1차 산업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주장하였다.<sup>35)</sup>

그는 또한 생산성이 낮은 농업이 취업인구의 다수를 포섭함으로써 농업부문이 잠재적 실업의 풀(pool)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인구증가율과 실업문제는 한국경제의 큰 고민거리였다. 1959년 말 현재 한국의 인구는 제1차 산업에 70.8%, 제2차 산업에 5.9%, 제3차 산업에 29.3%가 종사하고 있었지만, 소득 면에서 본다면 제1차 산업이 40.5%, 제2차 산업이 17.8%, 제3차 산업이 41.7%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sup>36)</sup> 토지규모가 과소한 농업은 생산성이 낮지만 과잉인구가 적체하고 있고, 공업은 생산가능성은 높으나 자원과 설비,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고용 인구를 크게 늘리지 못해 만성적으로 실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창렬과 이정환은 경제성장율이 5% 미만이면 머무른다면 실업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sup>37)</sup>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갈파하였다.<sup>38)</sup>

성창환, 이창렬, 이정환은 제2차 산업의 발전, 곧 공업화가 산업구조 재

34) 이창렬, 1960. 3, 「한국경제체제의 진로」, 『사상계』 8-3, 108~109쪽.

35) 이정환, 1960. 1, 「천하지대본의 경제학」, 『사상계』 8-1, 55쪽.

36)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1959. 12. 31, 『경제개발3개년계획의 요약』, 9~10쪽.

37) 이창렬, 1960. 2, 「한국실업의 특수원인」, 『사상계』 8-2, 55쪽.

38) 이정환, 1960. 1, 「천하지대본의 경제학」, 『사상계』 8-1, 56쪽.

편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다.<sup>39)</sup> 성장환, 이정환, 이동욱은 농촌의 부흥 또한 광공업의 진흥시킴으로써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하고 농업생산의 근대화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며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40)</sup> 농업생산의 진흥은 결국 근대적 광공업의 육성에 의해서만 타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sup>41)</sup> 이른바 농업과 공업의 동시발전이 아니라 공업 중심의 불균형성장론을 주장한 것이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은 본격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중국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다. 일제시기와 해방후를 거치면서 한국의 관료와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는 빈곤에서 싹튼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이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과 자본이 부족했다. 따라서 자원과 자본이 집중되어야만 했다. 이창렬과 이정환은 “자원과 자본은 부족하지만 노동력은 있다”<sup>42)</sup>고 언급하면서 섬유·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생산구조, 곧 기업수, 고용인원수, 생산량 등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본이 빈약하고 노동력이 과

39) 성장환, 1959,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의 기초』, 고려대학교출판부, 11쪽 ; 이정환, 1960. 1, 「천하지대본의 경제학」, 『사상계』 8-1, 59쪽 ; 이창렬, 「한국경제체제의 진로」, 1960. 3, 『사상계』 8-3, 108~109쪽.

40) 성장환, 1956. 1, 「농촌변영의 길(상)-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서」, 『사상계』 4-1, 290쪽 ; 성장환,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의 기초』, 고려대학교출판부, 1959, 11쪽 ; 이정환, 위의 글, 58쪽 ; 이동욱, 1960. 1, 「농촌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농업정책의 기본적 실책」, 『사상계』 8-1, 65쪽.

41) 성장환, 1956. 12, 「빈곤에서의 해방-경제안정과 변영의 길」, 『사상계』 4-12, 213쪽.

42) 이창렬, 1960. 3, 「한국경제체제의 진로」, 『사상계』 8-3, 103쪽.

인한 한국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체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간 진행되어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43)</sup>

또한 성장환은 경제부문을 민간과 정부가 담당해야 할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민간기업은 보호 육성하되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에 맞게 자본가의 자율과 창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영기업은 에너지, 수송, 중화학공업 등 몇 개 기간산업 분야로 제한하여 집중적인 투융자와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였다.<sup>44)</sup>

요컨대 ‘사상계 경제팀’은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유,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기간산업인 대기업을 국영화하여 정부가 재정투융자정책을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한국경제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sup>45)</sup> 기간산업 부분은 정부가 집중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주장이었다.

## 2. 자본동원과 외자도입 문제

‘사상계 경제팀’이 구상한 공업화와 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관건은 자본의 동원과 사용 문제였다. 그간 한국경

43) 이정환, 「대정부에 대한 제안」, 『서울경제신문』 1960년 7월 30일자(이정환, 2000, 『상아탑과 공직과 그리고 기업의 언저리에서』, 219~219쪽에서 재인용).

44) 성장환, 1956. 12, 「빈곤에서의 해방-경제안정과 번영의 길」, 『사상계』 4-12.

45)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묘목이 흠에 뿌리를 박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력에 의존할 것이며, 타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일단 이식한 묘목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타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성장환, 1956. 12, 「빈곤에서의 해방」, 『사상계』 4-12, 214쪽).

제의 전후 재건과 부흥은 전적으로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1957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무상원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경제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향후 동원될 자본은 무상원조가 아니라 국민의 저축과 세금, 혹은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차관 등이 될 것이었다. 무상이 아니므로 자본을 동원하는 문제뿐 아니라 배분과 사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그간 한국에 도입된 미국의 원조가 과연 한국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미국의 무상원조 외에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었다. 이는 곧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의 원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자본동원과 사용 문제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 원조는 과연 자립경제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사상계 경제팀’은 한국 경제가 미국 원조로 인해 외형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그 내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창렬은 한국 경제의 자립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원조가 “일시적인 호전상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중병 환자에 대한 캄플주사의 효능”일 뿐이라고 진단하였다.<sup>46)</sup> 이정환 또한 원조를 받아들이는 동안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6% 성장했으나 공업화는 지지부진했고 제당, 제분, 방직 등 소비재 산업부문은 과잉생산을 초래할 만큼 자본이 투하되었으며, 소비산업인 제3차 산업이 급성장했고 소득분배 면에서는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47)</sup> 원조를 받을수록 산업구조는 소비산업 중심이 되고 소득분배가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

46) 성장환, 위의 글, 207쪽.

47) 이정환, 1959. 12, 「미국의 외원정책 변경과 한국의 경제성장 문제」, 『사상계』 7-12, 219쪽.

되는 등 자립경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비판이었다.<sup>48)</sup> 이동욱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미국이 원조의 “주도권을 한국인에게 주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였다.<sup>49)</sup>

이러한 평가는, 해방 후 미국의 경제원조가 한국 경제에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대외의존성 심화와 산업구조 불균형, 소득불균형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반성이었다. 한국인들은 일제 식민지 경험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 없이는 정치적인 자주도, 진정한 독립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사상계 경제팀’은 첫째, 저축의 강행과 소비절약을 제안하였다. 이창렬은 소비생활을 절제하지 못하면 경제성장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하고,<sup>50)</sup> 국민운동을 통해 이를 적극 실천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로는 국내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창렬과 성장환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반성하고 우리가 가진 자본을 최대한 동원해서 착실하게 경제를 일으켜나갈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개척하여 “퇴장된 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유창순 또한 지금까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막대한 금액에 이르는 외국원조와 인플레이션적인 재정자금, 은행신용 대출로 공급되어왔지만, 한국 경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48) 이동욱, 1958. 9, 「한국경제의 정상화」, 『산업경제』 6-9, 3쪽 ; R.T.모이어·부완혁·이정환, 1961. 2, 「좌담회: 미국경제원조의 방향-미국의 대한원조를 재검토한다」, 『사상계』 9-2, 226쪽.

49) 이동욱, 1955. 9,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새벽』 2-5, 34쪽.

50) 이창렬, 1955. 5, 「대한경원의 변천소고」, 『사상계』 3-5, 108쪽.

51) 이창렬, 1954. 1. 1, 「한국부흥의 계획과 실천」, 『주간경제』 24, 32~33쪽 ; 성장환, 1956, 『한국경제론』, 장왕사, 9쪽.

는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상계 경제팀’이 공감하는 해법이였다.

셋째로는 원조의 다각화가 모색되었다. 그간의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왔지만, 미국 외의 국가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이정환은 적임지로서 독일과 일본에 주목하였다.<sup>53)</sup>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거셀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이 아니라 독립축하금과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군사정부의 대일 자세가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다. 당당히 청구권으로 식민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본과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사상계』 그룹 내에서도 충돌하고 있었다.

넷째는 수출의 확대였다. ‘사상계 경제팀’은 수출입 균형을 경제자립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sup>54)</sup> 이상구는 경제자립을 “수출입 균형 속에서 국민의 일정한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의 달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sup>55)</sup>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입 없이 국민경제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수출능력의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이상구와 이창렬은 미곡을 비롯한 농·광산물로 시작해서 직물공업

52) 유창순, 1960. 1, 「생활경제해설①-증권과 증권시장」, 『사상계』 8-1, 227쪽.

53) 이정환, 1961. 1, 「아이크의 7개 항목령과 한국경제」, 『사상계』 9-1, 183쪽.

54) 당시 ‘경제자립’의 개념과 수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제관료 및 학자들은 수출입 균형을 경제자립의 전제조건, 혹은 최저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정진아, 2008, 「이승만 정권의 자립경제론, 그 지향과 현실」, 『역사비평』 83 참조).

55) 이상구, 1958. 12, 「국제수지 개선책-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사상계』 6-12, 131쪽.

을 비롯한 경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상품으로 전환하고, 경공업의 수출력을 기반으로 중화학공업을 배양하며, 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국내에 필요한 시설과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원조 없이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6)</sup> 이상구는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비정상적인 대일무역을 청산하고 한일 간의 “무역을 정상화”할 것을 제안하였다.<sup>57)</sup> 이정환 또한 대일통상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동남아 및 남미 시장을 개척하자고 제안하였다.<sup>58)</sup> 그가 원조다각화의 대상으로 일본을 지목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한편, 동원된 국내외의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동욱은 “자본재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생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산업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sup>59)</sup> 이상구는 “부흥 도상에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생산재 성격을 띤 원재료와 기계 및 수송 부분품의 수입이 너무나 무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사상계 경제팀’은 그간의 원조물자 도입이 소비재에 치중되어온 점을 일관되게 비판하였다. 원조 도입이 전재구호를 위한 생필품과 소비재 도입에 치우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염두에 둔 시설재 도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사상계 경제팀’은 원조의 제1단계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비물자에 치중했다고 하더라도 제2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원조물자와 대층자금을 시설재 도입과 장기산업자금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sup>60)</sup>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시설재

56) 이정환, 1959. 12, 「미국의 외원정책 변경과 한국의 경제성장 문제」, 『사상계』 7-12, 223쪽 ; 이상구, 위의 글, 132~133쪽.

57) 이상구, 위의 글, 132쪽.

58) 이정환, 1961. 1, 「아이크의 7개 항목령과 한국경제」, 『사상계』 9-1, 183쪽.

59) 이동욱, 1949. 8, 「한국경제의 당면문제」, 『신천지』 4-7, 38쪽.

60) 이창렬, 1955. 5, 「대한경원의 변천소고」, 『사상계』 3-5, 107~109쪽 ; R. T. 모이어 · 부완혁 · 이정환, 1961. 2, 「좌담회: 미국경제원조의 방향-미국의 대한원조를 재검토한다」, 『사상계』 9-2, 231쪽 ; 성장환, 1959, 『한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도입과 장기산업자금 공급을 주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창렬은 정부가 5%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융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61)</sup>

‘사상계 경제팀’은 대미의존 일변도의 자본동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절약과 내핍을 감당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독일·일본 등으로 원조를 다각화하고 대일통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원된 자본을 정부가 재정투융자를 통해 생산재와 기간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여함으로써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그것이 경제자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국 ‘사상계 경제팀’이 제안한 원조 다각화와 수출확대 방안은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자본에 종속되는 방향이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반공자본주의 진영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지역통합전략을 실현하여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원조에 대한 부담을 독일, 일본과 분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독일, 일본으로의 원조 다각화는 결국 미국이 주창한 지역통합전략에 적극 포섭되는 지름길이었고, 이후 이 문제는 사상계 그룹 내부의 분열을 가져온다.

### 3. 경제의 계획화 논의

다음으로는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식이 논의되었다. 이는 결국 자유냐 계획이나 하는 문제였다. 자유냐 계획이나, 안정이나

---

기초』, 고려대학교 출판부, 42쪽.

61) 이창렬, 1960. 2, 「한국 실업의 특수원인」, 『사상계』 8-2, 44쪽. 이창렬은 정부의 재정투융자야말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이창렬, 1964, 『국내자본의 동원』, 91쪽).



성장이나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오랜 논쟁거리였다. 1950년대 후반 재정안정계획이 본궤도에 올라 인플레이션이 수습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미국의 원조가 감소되어 경제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정이나 성장이나 하는 논란은 성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54년 헌법 경제조항이 자유경제의 방향으로 개정되고 국·공영 기업체가 불하되었지만, 자유나 계획이나 하는 논쟁은 1950년대 후반 다시 점화되고 있었다. 후진국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과연 자유경제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를 통한 소련 및 동구권, 중국, 북한의 급성장도 이런 논의를 자극하는 요인이었다.

이동욱은 정책인 이상 계획이 없을 수 없지만, 자본가가 기업 경영과 자금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길 것을 주문하였다. 중공업도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반관·반민, 혹은 국고보조를 주더라도 자본가에게 맡기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관권경제, 부패와 비능률, 빈곤의 악순환의 주범으로서 계획을 지목하고 자유경제를 원리원칙대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sup>62)</sup>

그러나 성장환과 이정환, 이창렬, 유창순은 소련 및 동구권, 북한의 급속한 발전이 계획경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sup>63)</sup> 이들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서독이 7%의 공업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62) 이동욱, 1960. 3, 「자유경제체제의 확립」, 『사상계』 8-3, 84·88~91쪽 ; 이동욱, 1960. 6, 「아부경제에서 노력경제로」, 『사상계』 8-6, 191쪽.

63) 윤세원·신용균·유창순·김상협·김하태·황산덕·김성한·김준엽·안병욱, 1958. 4, 「좌담회: 우리사회와 문화의 기본문제를 해부한다」, 『사상계』 6-4, 267쪽, 유창순 발언 ; 이창렬, 1960. 3, 「한국경제체제의 진로」, 『사상계』 8-3, 102쪽 ; 성장환, 1960. 3, 「경제개발을 위한 자유와 계획의 조화」, 『사상계』 8-3, 61쪽 ; 이정환, 1960. 10, 「신경제정책에 기대한다」, 『사상계』 8-10, 154쪽 참조.

는 점에 주목하였다.<sup>64)</sup> 이들이 보기에 계획경제는 생산자원 및 자본동원, 급속한 성장에 있어 자유경제를 능가하는 건설체제였다.<sup>65)</sup>

성창환은 “자유와 통제의 무원칙한 잡탕에 불과한 현 시책을 시정”<sup>66)</sup> 하고 자유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일임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곧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은행을 비롯한 귀속기업체를 불하해 경쟁시킴으로써 관권경제를 청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67)</sup> 그러나 자유경제가 그의 소신은 아니었다. 다만 이승만정권의 선부른 통제방식이 관권경제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관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부패의 온상을 마련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sup>68)</sup> 성창환은 한국이 후진국이므로 자유주의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은닉자본을 투자로 유인하고,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무역을 통제하는 등 각종의 통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케인즈주의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투융자정책을 통해 경제부흥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69)</sup>

이창렬 또한 민간자본이 취약하고 경제구조가 후진적인 한국 경제상황에서 외국원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생산자금의 유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계획과 원료 및 자재의 공급, 기술지원 등 국가권력을 총집중하 가운데 계획경제정책을 투철하게 추진해야만 산업부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sup>70)</sup> 그는 특히 사회주의 후진국의 경제발전에서 계획경제가 나

64) 이창렬, 위의 글, 102쪽.

65) 성창환, 1960. 3, 「경제개발을 위한 자유와 계획의 조화」, 『사상계』 8-3, 61쪽.

66) 성창환, 1954. 3, 「물가안정과 산업진흥의 기본대책-저축과 투자문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67) 성창환, 1955. 12, 「1955년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회고-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말하는 좌담회」, 『사상계』 3-12.

68) 성창환, 1954. 3, 「물가안정과 산업진흥의 기본대책-저축과 투자문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참조.

69) 성창환, 1955. 9, 「한국경제의 진로」, 『심우』; 성창환, 1956.1, 「경제이론과 정책에 관한 기본고찰-한국경제의 현실에 즈음하여」, 『재정』 참조.

타낸 눈부신 성과에 주목하였다. 이창렬은 사회주의권에서 계획경제가 유례없는 고도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계획은 무계획적이고 산만하며 관권의 자의성이 가득한 비효율적인 계획이라고 갈파하였다. 그는 후진국 한국이 안고 있는 민족자본의 부족, 자원의 결핍, 노동인구의 과잉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본과 자원을 최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경제, 중점적인 국가계획을 추진하여 집중투자를 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생산을 자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1)</sup>

그렇지만 ‘사상계 경제팀’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정부가 모든 기업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민간기업과의 일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뿐이었다. 성장환은 자유경제 원칙에 의거하여 민간산업 부문은 민영화화되 유치산업은 정부가 보호 육성하며, 중요 산업 중 거대한 투자를 요구할 뿐 아니라 충분한 이윤을 보장할 수 없는 발전·철도·제철·탄광·비료제조·통신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국영화하고 재정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2)</sup> 그는 후진국인 한국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산업체제를 이원화하고 양 부문에 각각 자유와 계획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장환은 후진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가 강조한 후진국 정부의 사명은 ① 부패와 관권 남용을 청산하고 자유기업제도를 확립하는 것, ②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과 외환을 관리하며 수출산업을 지도 육성하는 것, ③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고용증대책을 마련하고 농촌 및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운동을 후원하는 것, ④ 자립정신을 드높이고 소비절

70) 이창렬, 1949. 3, 「산업부흥의 신구상」, 『민성』 33, 29~32쪽.

71) 이창렬, 1960. 3, 「한국경제체제의 진로」, 『사상계』 8-3, 106·108쪽.

72) 이창렬, 1950. 5, 「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 『협동』 29; 성장환, 1956.12, 「빈곤에 서의 해방-경제안정과 번영의 길」, 『사상계』 4-12 참조.

약, 외래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었다.<sup>73)</sup> 그는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일부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도 가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자유와 계획이 보완되어야만 후진국 한국의 경제가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정환은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계획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중앙계획기구는 국가의 경제행정을 조직화하고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 통제기능을 가진 중앙계획기구의 설립 없이는 경제개발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행정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구상하는 중앙계획기구는 각 부처의 상위에 위치하며 계획 작성을 담당할 산업개발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재무부 예산국, 부흥부 계획국을 중추기관으로 하고 내무부 통계국을 이관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였다.<sup>74)</sup>

그는 한국 자본가의 특징을 이윤추구 지상주의, 관권과의 결탁, 일인독재로 규정하고, 자본가들은 경영을 합리화·과학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노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sup>75)</sup> 곧, 한국의 자본가는 언제나 국민경제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기업을 운영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본가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나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나, 언제든지 국민경제의 지향하는 방향에 보조를 맞추어 국민경제와 사적 이윤과의 조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6)</sup>

이정환은 자본가의 의식전환 뿐 아니라 미국 원조가 감소되는 상황에

---

73) 성장환, 1960. 3, 「경제개발을 위한 자유와 계획의 조화」, 『사상계』 8-3, 64쪽.

74) 이정환, 1960. 10, 「신경제정책에 기대한다」, 『사상계』 8-10, 158~160쪽.

75) 이정환, 1960. 4, 「한국의 기업가정신」, 『사상계』 8-4, 82~83쪽.

76) 이정환, 위의 글, 83쪽.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서 하루빨리 대외의존성을 탈피하고 경제자립을 지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경제자립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전체로써 국민경제를 유효적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존 산업개발위원회의 기능을 확장하고 여기에서 작성된 계획을 국가의 중앙계획기구가 지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계획에는 생산과 무역이 지향할 방향에 대한 지침, 생산과잉 등을 방지하고 연관 산업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며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본동원, 수출시장 개척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7)</sup>

‘사상계 경제팀’은 자유경제체제만으로는 후진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으며, 계획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계획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자본가들이 이에 협력하는 경제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 Ⅲ. 군사정권의 등장과 ‘사상계 경제팀’의 전면 교체

이승만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상계』는 장면정권의 등장을 반겼다. 사상계 그룹은 친분이 두터웠던 김영선의 재무부장관 입각과 그의 협조 요청

77) 이정환, 1959. 12, 「미국의 외원정책 변경과 한국의 경제성장 문제」, 『사상계』 7-12, 221~223쪽.

을 계기로 사상계사 내에 ‘국제연구소’를 두고 『사상계』 편집위원을 주축으로 한 국내의 학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의 저명인사 30여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sup>78)</sup> 이들의 연구 성과는 『사상계』에 연구보고서로 실리거나 혹은 특별부록으로 출간되었다. 장준하, 신응균, 이만갑 등은 직접 국토건설사업 일선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면정권 집권 이후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여 정쟁을 거듭하였고, 결국 민주당 구파가 1961년 2월 20일 신민당 결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분당되었다.<sup>79)</sup> 민주당이 정쟁을 거듭함에 따라 4대 개혁입법 추진 등 4·19 혁명을 통해 분출되었던 개혁요구와 경제개발계획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장준하는 1961년 2월 『사상계』 권두언에서 “우유부단한 미봉책이 아니라 면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계획과 강력한 지도력에 의하여 우리들의 역사적 과제를 성과 있게 수행하여야 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정부의 과단성 있는 개혁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sup>80)</sup>

개혁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사상계 그룹은 이를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sup>81)</sup>이라고 규정하고 쿠데타에 적극 호응하였다. 이들은 5·16 군사쿠데타를 4·19 민주당의 혁명의 계승자로서, 장면정권의 무능을 극복하고 혁명을 계승하기 위해 등장한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혁명으로 평가하였다.

78)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1985,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32~33쪽.

79) 민주당과 신민당의 분당 과정에 대해서는 김은경, 1996, 「제1, 2공화국 시기 민주당의 신·구파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제3장 제1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80) 장준하, 1961. 2, 「권두언: 근로만이 살 길이다」, 『사상계』 9-2, 25쪽.

81) 1961. 6,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사상계』 9-6 참조.

당시 사상계 그룹 뿐 아니라 지식인들 대부분은 장면정권이 이루지 못한 혁명의 결실을 군사정권이 이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군사정권의 등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sup>82)</sup> 학생들과 혁신계 세력 또한 마찬가지였다. 함석헌은 쿠데타 직후부터 “총을 들면 정치가 아니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 한다”<sup>83)</sup>고 경고했으나,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불과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사상계 그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각 부처 장관들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군사정권에 대해서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준엽은 장준하와의 협의 하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으로 활동했고, 이정환은 재무부장관 고문이 되었으며, 1962년 1월 경제기획원이 제출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성안과정에는 성장환과 이정환이 학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sup>84)</sup> 이정환은 군사쿠데타 이후 재무부장관 고문 제의를 받고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장준하·김준엽·유창순 등 사상계 그룹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하였다고 회고하였다.<sup>85)</sup> 군사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계 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었다.

82)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 309~323쪽.

83) 함석헌, 1961. 7, 『5·16을 어떻게 볼까?』, 『사상계』 9-7 참조.

84) 김준엽, 1990, 『역사의 신』, 나남, 383쪽 ; 이정환, 2000, 『만송 이정환 회고록: 상아탑과 공직과 기업의 언저리에서』, 110~111쪽 ; 박태균, 2000,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77쪽 참조.

85) “나는 처음에는 백장관(백선엽)의 청을 사양했다...그런데 얼마 안 있어 고대의 김준엽 교수, 한은의 유창순씨, 그리고 사상계 주간인 장준하씨 3인이 합동으로 나를 찾아와, 고문 수락을 간청하여 왔다. 이 세 사람은 나와 같이 잡지 『사상계』의 편집위원을 하고 있던 관계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며, 이들의 요청은 내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수락하기로 하였다”(이정환, 2000, 『만송 이정환 회고록: 상아탑과 공직과 기업의 언저리에서』, 110~111쪽).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22일, 군사정부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경제개발계획을 제2의 혁명과업으로 선포하였다. 제일 먼저 단행된 조치는 경제행정기구의 개편과 경제기획원의 설치였다. 경제기획원은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를 관리하며, 국내외 경제기관과의 조정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상위조직인 원(院)으로 출범하였고, 산하에 종합기획국·예산국·물동계획국·통계국을 두었다. 이 조직 개편으로 건설부의 종합계획국과 물동통계국, 내부부의 통계국, 재무부의 예산국이 경제기획원으로 흡수, 집중되었다.<sup>86)</sup>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장단기 정책 조정, 대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외자 확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물가안정 시책 추진, 국가 통계제도 정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장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월례 경제활동 보고회’를 주관하였으며, 산하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협의체와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경제기획원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sup>87)</sup>

1961년 5월과 7월, 1962년 1월에 순차적으로 발표된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기본 목표로 하고, 농어촌과 주요 기간산업(전력·석탄·정유·비료·제철)에 치중하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장면정권의 계획에 비해 조세부담률을 12.7%에서 17.5%로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절약과 내핍을 강조하였고, 외자보다 내자, 특히 정부 재정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연평균성장률이 5.6%에서 7.1%로 상향 조정되었다. 수출액도 증가되었고, 곧바로 공산품을 수출하기보다는 농·광산품의 수출에서 점차 공산품으로 이동해나갈 것을 추구하였다.<sup>88)</sup>

86) 1961년 7월 22일 제정된 각령 제57호, 「경제기획원 직제」(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송정범, 1987. 1, 「경제기획원 탄생 전야」, 『경우지』 참조.

87) 경제기획원, 1982, 『개발 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20년사』 참조.



이는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과 공통점이 많았다. ‘사상계 경제팀’은 경제근대화의 선결조건으로서 경제개발계획과 기간산업 발전을 강조하였고, 자립경제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절약과 내핍, 정부 재정투용자의 강화, 수출증가 등을 촉구해왔기 때문이었다. 군사정권은 최고회의 및 경제장관, 재정경제위원회 등지에 광범위한 자문단을 두어 민심을 읽고 초기 정책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군사정권의 초기 정책에는 지식인들의 주장이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sup>89)</sup> ‘사상계 경제팀’이 군사정권의 정책에 호응하였던 것은 그들이 주장해온 정책적 내용을 군사정권이 전유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상계 경제팀’의 구성원들은 191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통제경제를 교육받고 몸소 통제경제를 경험한 인물들이었다.<sup>90)</sup> 이들은 일제의 통제경제에 비판적이면서도 통제경제가 갖는 효율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또한 ‘사상계 경제팀’은 1950년대 후반 원조가 감소하고 한국의 경제 자립이 현안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경제자립 모델로서 케인즈경제학, 후진국개발론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다.<sup>91)</sup>

- 
- 88) 박태균, 2000,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70~173쪽 참조.
- 89) 군사정권이 비록 굴절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체제내로 흡수하고, 현실비판적 지식인들을 기존 체제로부터 더 심각하게 격리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식계의 동향-산업화와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사회의 변동』,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백산서당, 2장 지식·권력관계와 지식인관의 변화 참조.
- 90) 이정환은 동경시대 유학시절 통제경제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는 통제경제법을 연구주제로 설정한 이유를 “전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심해지는 통제경제 양상을 띠게 되었고” 그것이 “시대적 조류”였기 때문이라고 회고하였다(이정환, 2000, 『만송 이정환 회고록: 상아탑과 공직과 기업의 언저리에서』, 33쪽).
- 91) 정진아, 2007,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제5장

이들이 주목한 것은 후진국에서는 과잉상태인 농촌유휴노동력을 경공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녀시의 자본축적론<sup>92)</sup>과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과 역할을 주창한 케인즈주의의 방법론<sup>93)</sup>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경제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일찍이 후진국의 산업구조 개편 및 공업에 대한 집중투자,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통제와 계획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사상계 경제팀’은 이승만정권의 자의적인 통제와 관권경제, 그리고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장면정권의 경제정책을 경험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계획,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도되어 갔다. 이것이 이들이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하고 참여하였던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사상계 경제팀’의 이러한 행보와 달리 장준하, 양호민, 신일철 등 사상계 그룹의 핵심인물들은 점차 군사정권과 간극을 벌여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양자의 관계가 순조로웠으나 함석헌의 군사정권에 대한 칼날 같은 비판 이후 사상계 그룹의 핵심인물들이 점차 군사정권의 본질에 대해 깨달으면서<sup>94)</sup> 군사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사상계

---

제1절 2항 경제자립을 위한 이론적 모색 참조.

- 92) 한국은행조사부, 1955, 『미개발국가의 자본축적』 참조. 이 책은 녀시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집트국립은행 창립 50주년 기념강좌 *Some Aspects of Capital Accumulation in Undeveloped Countries*를 가필하여 1953년 뉴욕에서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것으로서 1955년 한국은행 조사부에서는 이 책을 『미개발국가의 자본축적』으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 93) 성창환, 1956. 4, 「한국경제와 케인즈경제학-케인즈경제학은 후진국경제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사상계』 44, 101쪽.
- 94) 그 계기는 사상계에 대한 탄압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군사정권은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함석헌의 글이 실린 『사상계』를 지목하여 세무조사를 단행하였고, 1962년 3월 16일에는 ‘정치활동정화법’을 발표하면서 장준하를 부패 언론인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부패에 관련된 인물 명단에 올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장준하선생 10주기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1985,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그룹과 군사정권은 특히 민정이양 및 한일회담 문제에서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사상계 그룹은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의 등장을 환영하면서도 혁명과업 완수 후에는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는 “혁명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할 것을 주문하였다. 혁명공약을 실천한다면 “국군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상(史上)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군사혁명이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 국민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sup>95)</sup> 그러나 군사정권은 이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대민사찰을 강화하였고,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서구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문제 삼는 듯 했지만, 정작 한일회담 과정에서는 청구권을 포기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1962년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착수되는 해였다. 군사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협정 타결을 서둘렀다. 그러나 사상계 그룹은 청구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국교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경제실무를 협의한다는 한일협정 추진의 철칙을 세우고 일본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sup>96)</sup>

사상계 그룹은 1962년 7월부터는 그간 호의적이었던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의욕의 과잉”과 “체계화되지 않은 혼합경제정책”으로 경제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6월 9일 단행한

---

사상계, 40~41쪽 참조).

95) 1961. 6,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사상계』 9-6.

96) 1961. 10, 「권두언: 한·일문제의 해결을 재론한다」, 『사상계』 9-10 ; 1962. 2, 「권두언: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한·일문제」, 『사상계』 10-2 참조.

통화개혁이 퇴장된 유휴자본을 동원하기는커녕 물가폭등을 야기하였기 때문이었다. “환자의 체질을 파악함 없이, 심약한 환자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채로 좋다는 모든 영양소와 치료방법을 나열적으로 쓰거나, 병약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을 앞으로 뛰도록 독촉하는 폐해는 없는지 성찰해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한국경제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무분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간 정부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강조해왔던 사상계는 “과감성과 만용도 과학적인 뒷받침에서 솟아나온 것이라야 한다. 불연(不然)이면 그것들은 무모에 가깝다”고 논평하며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sup>97)</sup>

그러나 사상계 그룹의 군사정권 비판에 ‘사상계 경제팀’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사상계 경제팀’ 중 군사정권에 참여하고 있던 유창순, 이정환, 성장환은<sup>98)</sup> 1962년 중반 통화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자 이것을 “의욕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한 번 겪는” 과정상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의 살길이 발견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sup>99)</sup> 이상구가 언급하였듯 이들은 경제성장을 “진취적인 정예분자”가 나타나 민족주의적 열망을 경제근대화에 집중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고,<sup>100)</sup> 군사정권을

97) 1961. 7, 「권두언: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 『사상계』 9-7; 김영록, 1962.3, 「5개년 계획과 거시적 접근방법.평면적 계획보다 입체적 계획을」, 『사상계』 10-3 참조.

98) 1961~1962년 유창순은 한국은행 총재과 상공부장관을, 이정환은 재무부장관 고문과 농협중앙회 회장을, 성장환은 최고회의 의장 고문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었다.

99) 김영선·부완혁·유창순·이기홍·이동욱·김영록, 1963. 12, 「좌담회: 인기경제정책의 말로-경제불안은 장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데서」, 『사상계』 11-12, 138쪽, 유창순 발언.

100) 이상구, 1962. 2, 「동양적 후진성에 대한 로스토우의 분석-서양인이 본 동양의 후진성」, 『사상계』 10-2, 90쪽.

진취적 정예분자로 간주하였다.

결국 군사정권 등장 이후 혼돈과 분열을 겪던 사상계 그룹 내부의 군사정권에 대한 입장차는 1962년 10월 사상계 편집진이 대폭 교체되면서 정리되었다. 그간 ‘사상계 경제팀’을 형성해왔던 성장환, 이정환, 이창렬은 모두 편집위원직에서 물러났고, 『사상계』는 주간 양호민, 편집국장 신일철, 편집위원 김성한·김영록·안병욱·여석기·이만갑·현승중 체제로 정비되었다. 경제 분야에는 1962년 초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군사정권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던 김영록<sup>101)</sup>이 합류하였다. 편집진의 교체로 인해 사상계 그룹 내부의 입장차는 정리되었으나, 경제 분야는 내용상의 취약성을 면치 못했다. 신임 편집위원 김영록의 논설이 종합적인 비판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제개발계획과 통화개혁, 인플레이션, 원조, 쌀 문제 등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안별로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sup>102)</sup> 이는 근본적으로 사상계 그룹이 군사정권의 반공 민족주의, 근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963년 이후 군사정권과 사상계 그룹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실을 들

- 
- 101) 1921년 평북 영변에서 태어나 만주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6·25전쟁 중 UNCAC(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신문사 논설위원, 고려대 강사, 수산중앙회 등에서 일하다가 4·19혁명 후 장면정권에서 외사청 외사국장, 재무부 관재국장과 이재국장을 지냈다(『Joins 인물정보』;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 307~308쪽 참조).
- 102) 김영록, 1962. 3, 「5개년계획과 거시적 접근방법-평면적 계획보다 입체적 계획을」, 『사상계』 10-3; 김영록, 1962. 7, 「통화개혁만상」, 『사상계』 10-7; 김영록, 1962. 9, 「인플레 천기예보」, 『사상계』 10-9; 김영록, 1962. 12, 「더듬는 경제진단」, 『사상계』 10-12; 김영록, 1963. 3, 「이유없이 물가는 오르는가-물가통제 과잉의 악순환도」, 『사상계』 11-3; 김영록, 1963. 4, 「선진국과 후진국-빈곤의 악순환과 자립경제」, 『사상계』 11-4; 김영록, 1963. 5, 「미국원조의 전망-민주주의적 전통에 배치되는 원조는 안 된다」, 『사상계』 11-5; 김영록, 1963. 6, 「쌀의 위기냐? 쌀 정책의 위기냐」, 『사상계』 11-6 참조.

러싸고 침예하게 대답하였다. 군사정권과 사상계 그룹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간극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안은 바로 군정 연장과 한·일 회담이었다. 사상계 그룹은 함석헌의 논지를 수용하여 민주주의의 주체는 군인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정 연장을 획책하는 군사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를 가짜 민족주의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정권과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sup>103)</sup> 그간 군사정권에 개발 담론을 전유당함으로써 군사정권과의 경계선을 찾지 못하던 비판적 지식인들은 군정 연장과 한일회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비로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해가기 시작하였다.

## 맺음말

1950년대 후반 성장환을 중심으로 이상구, 유창순, 이정환, 이동욱, 이창렬로 구성된 ‘사상계 경제팀’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상계 경제분야에 논설을 기고하며 『사상계』의 개발 담론을 주도했다. ‘사상계 경제팀’은 민간주도의 자유경제체제만으로는 후진국의 산업구조 재편과 공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후진국인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자본동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경제계획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경제계획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

103) 1963. 6, 「권두언: 의회민주주의를 모략하지 말라-대일의존경향을 경계한다.」, 『사상계』 11-6, 27쪽.

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자본가들이 이에 협력하는 경제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에 따르면 사상계 그룹은 민간주도 경제개발론을 주장한 민주당 신파와 정책론적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계 경제팀’은 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사상계 그룹은 군사쿠데타를 장면정권의 무능을 극복하고 4·19 혁명을 계승하기 위해 등장한 민족주의 혁명으로 평가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준업, 성장환은 최고회의 의장 고문으로, 유창순은 한국은행 총재와 상공부 장관을 거쳐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이정환은 재무부 장관 고문을 거쳐 농협중앙회 회장과 재무부 장관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성장환과 이정환은 경제개발계획 성안 과정에도 참여하였다.

군사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산업구조적으로는 주요 기간산업(전력·석탄·정유·비료·제철)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하고, 자본동원에 있어서는 소비절약과 내핍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자 보다 내자, 특히 정부 재정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최고회의 및 각 부처에 광범위한 자문단을 두어 민심을 읽고, 경제정책의 골격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상계 경제팀’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던 것은 군사정권이 이들이 구축해온 개발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상계 경제팀’이 ‘민생’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반해, 군사정권은 민족과 국가의 부흥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에 역점을 두었고, ‘사상계 경제팀’은 민주주의와

근대화 문제를 나누어 사고한 적이 없지만 집권에 정당성이 없었던 군사정권은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선후의 문제로 분리시켰다는 데 있었다. 군사정권은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과 지지부진한 개혁정책으로 지쳐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유포할 것을 강요하였다. 군사정권은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을 일면 활용하면서도 일면 왜곡하였던 것이다.

사상계는 분명 반공 민족주의, 근대주의로 가득 찬 텍스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20세기는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의 시대였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냉전과 분단, 전쟁과 전후 체제경쟁에 휘말려 있던 한국 지성계가 민족주의와 근대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점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지성계가 축적해온 개발 담론이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일정하게 반영되면서 자본과 시장 주도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계획이라는 방식으로 정초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한말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더불어 일제하의 경제적 실력양성론과 통제경제론,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정립된 사회적 국가론의 내용을 자본주의 건설노선의 전통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해방 후 국가건설론의 자양분으로 축적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수립 후 우파와 중간파는 국가가 중개자로 나서서 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통제정책을 수립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경제계획을 통해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건설을 선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이었다.

6·25 전쟁 후와 군사정권 등장 후 균등경제와 공익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던 헌법 조항들이 대폭 손질됨으로써 제헌헌법에서 국가에 부여되었던 역할 중 공공성의 영역은 현저히 축소되었고, 민생은 자본의 논리와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생산력 지상주의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군사정권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목표로 표방되고 있었다.

이는 적어도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변화와 혁명을 표방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일종의 ‘수동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군정연장과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통해 군사정권과의 경계선을 찾은 사상계 그룹을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제 군사정권에 의해 전유된 개발담론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대항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 Abstract

# Development Discourses of ‘the Sasangge Economy Team’ in the Late 1950s Early 1960s

Chung, Jin-A

The Sasangge Economy Team organized in the late 1950s with members Lee Sang goo, Yoo Chang soon, Lee Dong wook and Lee Chang ryeol under the leadership of Seong Chang hwan contributed discourses for the economic section of Sasangge and led development discourses from the late 1950s to the early 1960s. ‘The Sasangge Economy Team’ aimed a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government l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s.

With the occurrence of the 5·16 Military Coup, the Sasangge group approved it as a national revolution succeeding the 4·19 Revolution, and provided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the military regime.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s promoted by the military regime had many things in common with the development discourses of the Sasangge Economy Team in that they concentrated on major backbone industries (electric power, coal, petroleum refining, fertilizer and iron) and labor intensive industries, emphasized economy in consumption and frugality, strengthened the role of internal resources, especially, the government’s financial sector rather than external resources, and targeted economic growth as high as 7%.

From the beginning just after the coup d'état, the military regime organized extensive advisory committees for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d other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built up the framework of economic policies. The reason that Korean intellectuals including the Sasangge Economy Team advocated the military regime's economic policies was that the military regime actively appropriated the development discourses that they had established.

Sasangge is obviously a text full of anti Communist nationalism and modernism. However, the 20th century was the age of nationalism and modernism, and in those days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the Korean intellectual circle, which was caught up in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just after the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postwar regime competition, to go beyond nationalism and modernism. Rather, we should take note that, as part of development discourses accumulated by the intellectual circle were reflected in the military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plans, government led planned economy was settled instead of liberal economy led by capitals and markets.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emergence of the military regim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economy of equality and public interests were amended drastically. In addition, among the roles assigned to the state by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public areas shrank considerably and people's life was forced out by the logic of capital and productivity first policies. Nevertheless, the state's roles such as the stability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fe and the realization of a welfare state were still included as the basic goals of the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is suggests that the military regime was unable to promote changes and reforms without solving problems in people's life. In this sense, the military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plans are a kind of 'passive revolution' by

nature. Critical intellectuals including Sasangge who found a boundary with the military government through their struggles against the extension of the military rule and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were faced with the tasks to reflect fundamentally on the limitations of development discourses appropriated by the military regime and to develop counteracting discourses.

Keywords : Sasangge, Sasangge Economy Team, development discourse, government led industri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plans, 5·16 Military Coup, military regime, passive revolution